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고의 살인 아니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 들어” SPC ‘초과근무’ 폐지에 “늦었지만 다행… 신속히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포스코이앤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섯 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한 직장인 완전 전생태가 된 것 아니냐”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수도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맨홀에서 질식사한 사고도 언급하며 “폐쇄된 공간에 일을 하러 들어가면 질식사 사고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도 없이 일을 하게 하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법률적 용어에 의하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한 결과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방문했던 SPC가 ‘8시간 초과근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SPC)는 말했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SPC)는 이전에도 1000여 억 원을 들여서 동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보라고 했다”며 “이번엔 신속하게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후진적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명색이 ‘10대 경제강국’에 ‘5대 군사 강국’, ‘문화강국’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주의 국가다.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청·하청 관계를 언급하며 “네다섯번씩 하청이 되면서 원도급 금액의 절반 정도로 실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법으로 금지된 것인데 방치돼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같은 데서 일

년에 다섯번씩 산재 사고가 나는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한번 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어느 한 부처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냐”라며 “올해가 산재 사망의 근절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국무회의를 일부 생중계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회의 일부가 공개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회의 내용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 잘 알아… 책임지고 현장 살필 것”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은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지난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오랜 논의와 숙고가 이뤄졌다”며 “이번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정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 노사 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율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진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길”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관련 브리핑

“진짜 성장” 초석되도록… 이행 준비에 만전 다할 것

“재계 요구 반영에 최선… 현장 안착에 어려움 없을 것”

유럽상의 ‘철수 우려’에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고 싶다”

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진짜 성장법’이라고 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유에서도 ‘노동권’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분명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 우려와 관련해 “준비기간 동안 국회와 협력하며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했고, 노동계를 향해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이 “이번 개정안에 재계 요구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노동계가 다소간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 분배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도 구체화시켰다”고 했다.

또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정되면 파업은 가능하”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사용자성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디지털 기술혁신은 이제 자연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축적돼있는 선례나 판결들을 볼 때 현장에 안착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화오션, CJ 관련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입장문을 내고 해외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행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스탠더드는 전 지구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이 함께 가져야 될 기준”이라며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만나 뵙고 어떤 걱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밖에도 “취업한 지 일주일인데, 더 많은 각계 의견을 듣고 좀 더 조율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회의에

서 관련 법이 두 번이나 통과됐고, 두 번 다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회 결정에 따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월의 시행 유예를 둔 것에 대해서도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 법이 어떻게 교섭 절차로 안착될 수 있을지 마련하겠다”며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서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14개월 만 국회 윤리특위 구성 합의

운영위 29일 전체회의서 ‘윤리위 구성 결의안’ 의결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몫 2명(정의당·국민의당)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만 참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안전 처리 과정에서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

교섭단체 의원 2명이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섭단체를 윤리특위 구성원에서 배제했다. 또 안전이 ‘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으로 적시해 올라오면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는 7개 정당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에도 (비교섭단체가 윤리위에) 배정이 됐고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

단체가 2명이나 배정됐다. 합의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전 내 ‘국민의힘·민주당 6인’ 표기를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겨수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돼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 뒤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명은 윤리위 의결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뉴시스

해양치유원도 Marine Healing World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 ~ 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프로그램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소인 26,000원	대인 28,000원 소인 22,000원	대인 80,000원	대인 125,000원	1:1 90,000원 2:1 70,000원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QR Code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